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9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북유럽 3개국(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019.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목 차 〉

I . 출장개요	1
II . 주요 기관 방문	4
1.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	4
2. 반타(Vantaa) 시청 및 시의회	8
3.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12
4. 스웨덴 국립 사회보험청 가정보험정책과	16
5.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 학교 교육개발부	20
6. 노르웨이 관광청	24
III . 주요 현장 방문	28
1. 핀란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28
2. 스웨덴 바사 박물관	29
3. 노르웨이 비겔란 조각공원	30
4.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사	31
※ 참고 1. 현지정보	32
※ 참고 2. 출장자 명단	38

2019년 북유럽 3개국(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출장목적

- 시민 참여윤리 및 합의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북유럽의 의회 및 기관 방문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정책사례 벤치마킹
-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 모색

출장내용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 협회, 지역의회, 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한 현지 행정제도와 우수정책 청취
- 방문국 특화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현장 답사
-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출장인원 : 총 19명

- 전국 시·도의회 의장 8명(강원·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경북·경남)
 - 각 시·도 의회 회기일정 및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존 많은 수의 참가를 지양, 분할 실시
- 시·도의회 담당직원 8명, 협의회사무처 직원 3명

방 문 국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핀란드 : 헬싱키, 반타

-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로 1155년 십자군에 정복되어 스웨덴 일부로 병합되었고, 1809년 러시아 자치령으로 흡수됨
- 1917년 독립 선언 후 1918년 독립된 통일국가 수립
- 서쪽으로 스웨덴, 동쪽으로 러시아, 북쪽으로 노르웨이 등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지님
- 수도인 헬싱키-우시마 지역에 전체 핀란드 전체 인구의 1/3인 17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역격차 문제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함

○ 스웨덴 : 스톡홀름

-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의 두배 크기임
- 한국과 유사하게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중이나, 점차 사교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인 복지국가로서 위상이 높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수당제공 등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노르웨이 : 오슬로, 베르겐

-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4년 스웨덴과의 연합이 수립되었으나, 1905년 연합에서 분리,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음
- 1800년대 초반 해도 소득 수준이 유럽 최하위였으나, 1969년 북해에서 원유 발견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2위의 부국으로 성장하였음
- 2006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4배, 투자규모는 15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출장기간 : 2019. 7.29.(월) ~ 8. 6.(화) / 7박 9일

- 출 국 : 2019. 7.29(월) / 핀에어(AY042) 10:20 인천 출발
- 귀 국 : 2019. 8. 6(화) / 핀에어(AY041) 08:20 인천 도착

■ 주요 방문기관 및 현장견학

○ 기관방문(6)

- 핀란드(3) :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 반타 시청·시의회,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 스웨덴(2) : 국립사회보험청 가정보험정책과, 지방자치연합회 학교교육개발부
- 노르웨이(1) : 노르웨이 관광청

○ 현장견학(4)

- 핀란드(1) :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 스웨덴(1) : 바사 박물관
- 노르웨이(2) : 오슬로 시청사, 비겔란 조각공원

○ 일자별 주요 방문지

방문일시		방문기관(시설) 및 주요내용
7.29(월)	14:00	○ 핀란드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
7.30(화)	10:00	○ 반타(Vantaa) 시청 및 시의회
7.31(수)	10:00 14:00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8. 1(목)	10:00 13:30 16:00	○ 스웨덴 국립 사회보험청 가정보험정책과 ○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 학교 교육개발부 ○ 바사 박물관
8. 4(일)	15:00	○ 비겔란 조각공원, 오슬로 시청사
8. 5(월)	09:00	○ 노르웨이 관광청

■ 국가별 체류일정 요약

- ① 인천공항 출발(7. 29 / 10:20) → ② 핀란드 헬싱키(3박) →
 ③ 스웨덴 스톡홀름(1박) → ④ 노르웨이 베르겐·오슬로(3박) →
 ⑤ 인천공항 도착(8. 6 / 08:20)

II

주요 기관 방문

1.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

□ 방문일시 : 2019. 7. 29.(월) 14:00 ~ 16:00

□ 개 요

- 영문이름 : Helsinki-Uusimaa Regional Council
- 관할구역 : 수도권 26개 지자체(헬싱키 포함 인근 지자체)
- 구성현황 : 의회(80명 지역의원) / 15개 상임위 / 사무처 구성
- 주요기능 : 지역 발전전략, 지역 토지 이용계획 수립 및 국제 협력 등
- 발표(면담)자 : Ossi Savolainen(Regional Mayor, 지역 시장)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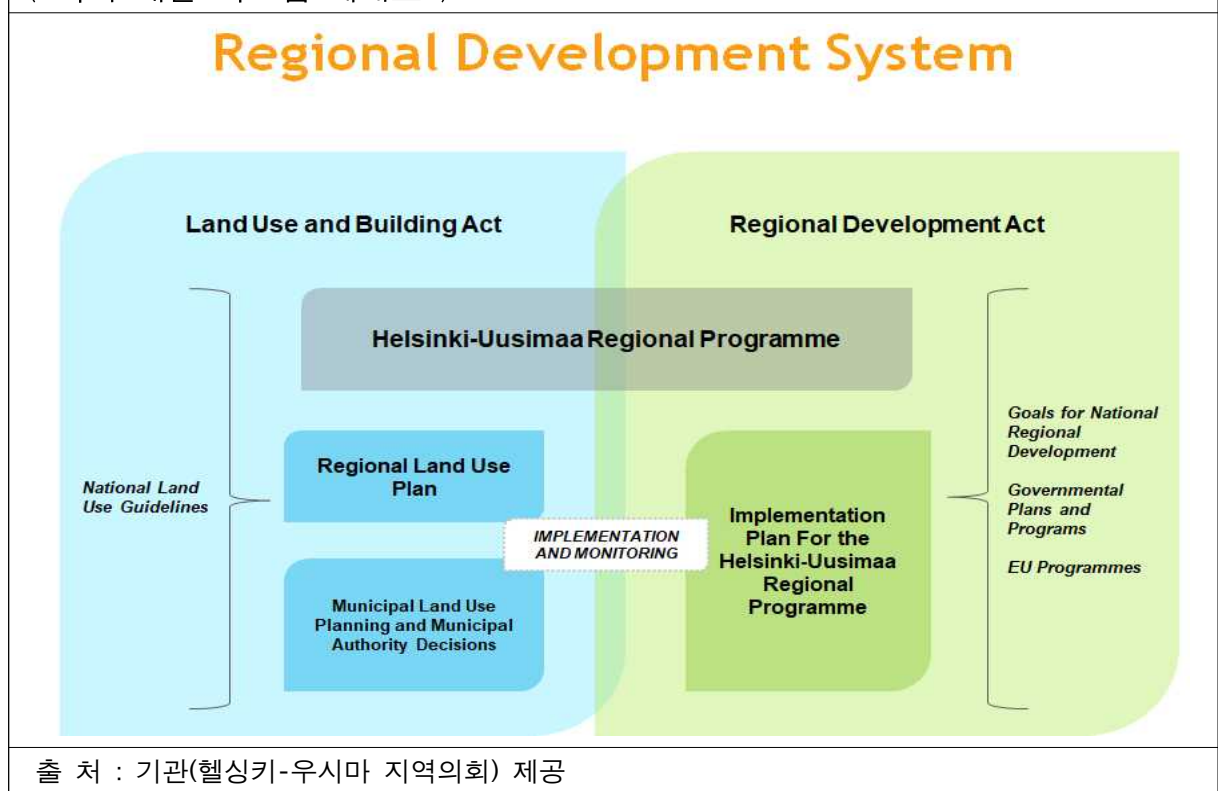
- 헬싱키-우시마 지역은 핀란드 수도권 지역으로 북유럽 발트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음
- 핀란드 국내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 인구 및 소비 중심지이며, 300km의 해안선과 2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음. 또한 국제공항과 4개의 국제항구가 입지하고 있는 국제도시임.
- 해당 지역은 핀란드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전체 540만 인구의 29%(170만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헬싱키-우시마 지역 현황 >

- 구성 : 26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구성
- 면적 : 9,440km²(전체 국토 면적의 3%)
- 인구 : 170만명(전체 인구의 29%) ※ 연 평균 15천명의 인구 증가
- 경제 : 핀란드 전체 GDP의 38%, 전체 노동인구의 31% 차지

-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는 26개 지자체의 법적 연합체로 핀란드 전체 18개 지역의회 중 하나로서, 연간 예산은 8,400만 유로(한화 약1,100억원)로 소속 26개 지자체 분담금으로 충당함.
- ※ 핀란드는 전체 311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권역별로 각 지자체 연합형태의 18개의 지역의회가 구성되어있음
- 지역 의회 조직은 의회(80명 의원), 15개 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며, 매4년 마다 선출된 지자체 정치인이 구성원으로 활동함.
 - 주요정당 : 국민연합당(22석), 녹색당(15석), 사회민주당(14석) 등
-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는 주요기능은 토지이용 계획 수립, 지역개발 행위 및 국·내외 협력 업무 등이 있음.

〈 지역 개발 시스템 체계도 〉



- “헬싱키-우시마 지역을 발트해 지역의 중심으로”라는 2040년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 지역 계획, 국·내외 노동정책, 국가 및 EU 프로젝트 수행 등 중·장기 실행계획을 주요 업무로 함.
- 정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로 전달·실행하는 구조임.

시사점

-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정치, 행정, 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큰 차이점이 있지만,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른 불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타 환경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유사함.
 - ※ 수도권 지역은 핀란드 전체 면적의 3% 해당, 전체 인구의 29%(170만명) 거주, 전체 GDP의 38% 차지
- 다만,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과거 군사정부 시대로부터 중앙정부 권력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분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핀란드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국가로서, 앞서 언급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지자체의 권한을 지역의회(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광역의회)로 대폭 이양하여, 보다 균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사회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국가구조변화에 대한 저항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반대여론 등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폐기되었음.
 - ※ 사회개혁안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311개 지자체 → 18개 지역으로 통합
- 두 나라 간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과 각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개발이라는 목표는 동일함.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령·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확립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 방문사진



2. 반타(Vantaa) 시청 및 시의회

□ 방문일시 : 2019. 7. 30.(화) 10:00 ~ 12:00

□ 개 요

- 영문이름 : Vantaa Kaupungintalo
- 구성현황 : 67명의 의원 및 8개 위원회
- 주요기능 : 반타 市 개발 전략,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 의결
- 발표(면담)자 : Hannu Penttila(Deputy Mayor, 부시장)
Merja Häsänen(Architect and Urban Planner, 市 건축가)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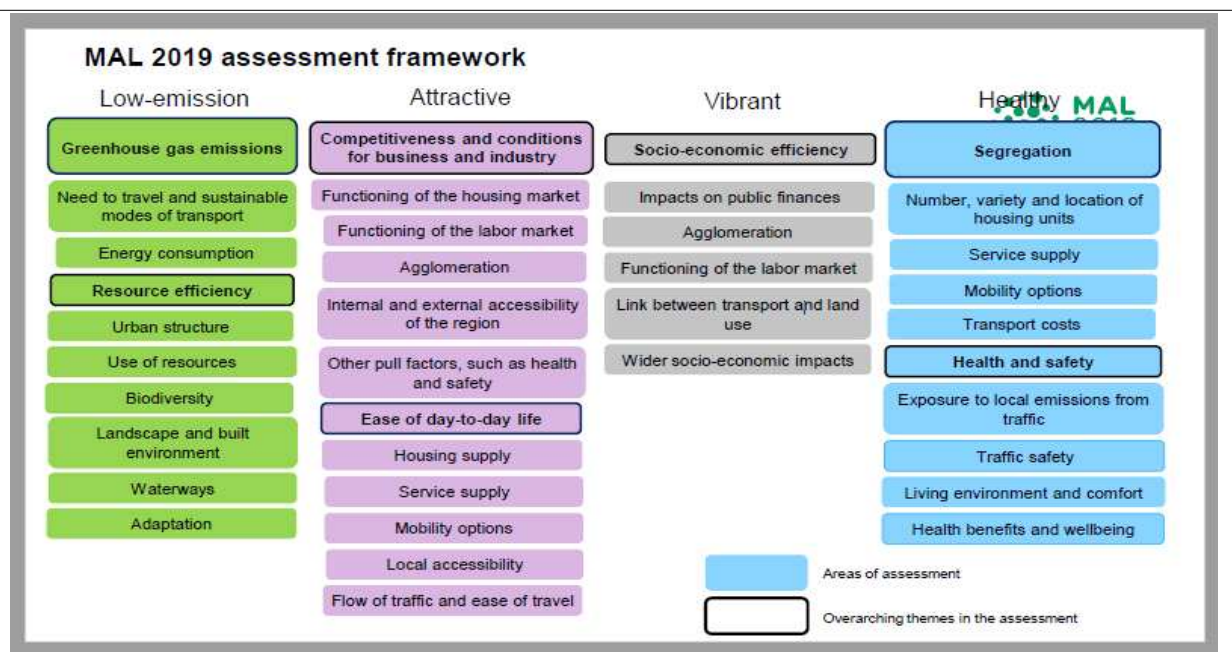
- 반타시는 23만 인구의 핀란드에서 4번째 규모의 도시임.
- 지역내 국제공항, 철도 소재지로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특히, 공항지역 일자리 연계가 활발하여 인구는 연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 지자체 중 가장 가파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일자리 110,784개(2016.12월), 실업률 7.9%(2019.4월)
- 수도권(헬싱키, 에스볼라, 반타) 3개 도시 연합체를 구성하여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주요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4년 주기 선거, 2017년 ~)하며, 현재 총67개 의석 9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정당 : 사민당(18석), 국민연합당(17석), 녹색당(12석) 등

〈 반타시·의회 주요 현황 〉

- 인 구 : 23만명 ※ 연 평균 5천명 증가
- 일자리수 : 110,784개(2016년도말 기준)
- 실 업 률 : 7.9%(2019.4월 기준)
- 운영예산 : 연간 15억 유로(한화 약2조원)
- 조 세 율 : 19%
- 의회구성 : 67석(9개 정당) ※ 매 4년 주기 선거(2017 ~)

- 2019년 반타시 주요 정책은 「MAL 2019」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음.
 - MAL : Land use(토지이용), Housing(주거정책), Transport(교통정책)
- 「MAL 2019」의 주요 목표로는 1)탄소 배출 저감, 2)투자유치 및 인재 유인, 3)생동력 있는 지역개발, 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이 있으며, 각 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함.
 - 탄소저감 : 2005년 대비의 2030년 탄소배출 50% 저감
 - 노동시간 : 현재 수준의 최소 10%이상 감축
 - 주거환경 : 토지 개발로 도심지역 주거 단지 조성 90% 확대
 - 대중교통 : 대중 교통수단 이용율 최소 70% 확대

〈 2019년 반타시 주요 정책 목표 〉



출 처: 기관(반타시) 제공

- 탄소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심권 주거복합 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이 있음.
 - 지역내 인구증가에 따른 운송수단 확보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경전철(트램) 신설 추진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에너지 집적 활용을 위한 도심내 복합 주거 단지 조성
 - 도심내 주차공간 대폭 축소 및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쿼보드) 장려 등

시사점

- 녹지, 수질, 대기질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핀란드 이지만,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과 탄소저감 정책이 지자체 주요 정책목표인 점이 인상 깊었음.
-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계획은 큰 틀에서 탄소저감 및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내 주차구역 50% 이상 감축, 대중교통 친환경 에너지 100% 활용, 지역난방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우리나라 수도권 등 도심환경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시민 보호를 위한 많은 정책 (차량이부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또한 최근 인천, 서울 등에서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바 있음. 핀란드는 수도관에서 나오는 직수를 바로 음용수로 사용할 만큼 맑은 수질을 자랑하고 있음.
 -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원 자체가 깨끗하기도 하지만, 수돗물 생산시 물리적 여과 이외에 화학적 여과작용을 실시하지 않아 화학반응에 의한 관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음
- 환경문제는 국가의 주요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반타 시청·시의회 방문사진



3.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 방문일시 : 2019. 7. 31.(수) 10:00 ~ 12:00

□ 개 요

- 영문이름 : Local and Regional Governmaent Finland
- 구성현황 : 311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구성
- 주요기능 : 중앙정부-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합의도출
- 발표(면담)자 : Minna Karhunen(CEO)

□ 주요내용

- 핀란드는 311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인구 100여명의 가장 작은 지자체부터 최대 인구 65만명의 수도 헬싱키 까지 다양한 규모로 구성되어있음.
-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9개로, 9개 지자체가 핀란드 전체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인구의 30%, 일자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자체간 재정 및 인구 불균형이 해소과제임.
 - 지자체에서 광의의 지역정부(의회)로 권한이양을 통하여 폭넓고 균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개혁안’을 시도했으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우려 등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폐기된 바 있음.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핀란드는 정책 변화시 헌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여부가 근본적 고찰 지점임
- 핀란드 중앙정부는 행정, 국방 등 한정적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지방정부가 가진 지역 민주주의, 자치 의결권, 조세 권한 등 강력한 자치권에 기반하고 있음.
- 핀란드 지방정부는 정치분야와 전문행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체계를 지자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단, 의회·시장·감사 구성은 필수 요소임.

- 지방정부와 핀란드 중앙정부는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 하에서 사회 서비스 사업을 함께 수행함. 이 과정에서 생기는 중앙-지방 간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 합의도출 등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연합회는 23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사무소는 수도인 헬싱키에 위치 하고 있음.
- 연합회는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성평등 및 차별없는 사회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으로는 지자체 관심분야 정책개발, 서비스 수요 창출 및 조사, 선거권 없는 학생 등의 여론수렴 등이 있음. 특히, 학생 여론수렴 기능은 선거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연합회 조직 구성을 살펴보자면, 최상위에 각 지자체에서 선발·파견 된 대위원회를 두고, 하위에 9개 정당 소속의 위원회를 두며, 그 밑에 7년 임기의 CEO 1명 및 부운영국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부서로는 법률, 경제, 교육,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으며, 별도 자회사로는 컨설팅, 출판사, 조달업체 등이 있음.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조직 구성 〉



출 처 : 기관(지방자치단체연합회) 제공

시사점

- 핀란드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1/10인 540만명에 불과하지만 지자체 수는 오히려 85개가 더 많은 31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음
 - ※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명에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자체 간 인구규모 및 재정력 차이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가적 관심 과제임
- 얼마 전 추진되었던 ‘사회개혁안’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헌법상 보장된 지자체 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결국 폐기된 바 있음. 이처럼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참여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임.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4대 단체장 협의회(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의회의장)가 있는 반면, 핀란드는 단체장 중심이 아닌 국가 전체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가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 간 갈등조정 및 지원 기능이 지자체 협의회 보다는 중앙부처 중심인데 반하여, 핀란드는 지자체 연합회를 통해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연합회는 지자체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 중앙정부와의 갈등조정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또한 투표권 없는 학생, 아동 등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 등 선거 민주주의 보완기능도 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검증된 전문경영인을 두고 있으며, CEO인 Minna Karhunen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등의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자 전문 행정능력을 갖춘 자이었음.
-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 분권 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시점에서, 그 간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갈등 조정, 통합 서비스 개발 등을 지자체 연합을 통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회 방문 사진



4. 스웨덴 국립 사회보험청 가정보험정책과

□ 방문일시 : 2019. 8. 1(목) 10:00 ~ 12:00

□ 개 요

- 영문이름 : Forsakringskassa
- 주요활동 :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정보험 정책 운영현황 청취
- 발표(면담)자 : Stina Kelly von Essen(지역관리자)

Linda Marklund(사업개발자 및 변호사)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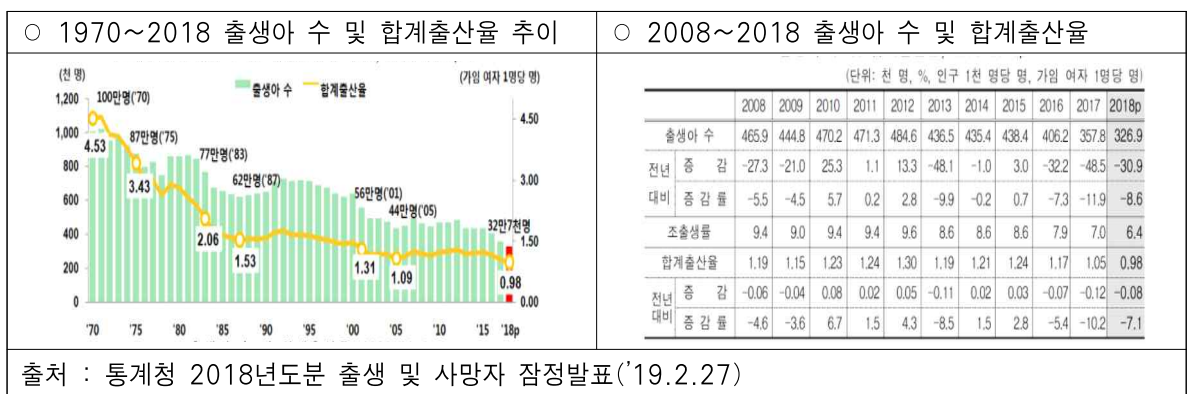
-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만큼 세계 제1의 복지국가로 유명함.
- 스웨덴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 등 다양함.
- 모든 사회보험서비스는 290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1700년대 최초로 병가 보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40여개 종류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음.
- 크게 5가지로 분류해보면 ①가정복지 ②병가 ③장애 ④치아(의료에서 별도 구분) ⑤연금(연금청 관리) 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공을 위해서 관리기관은 크게 ①정부 ②사회보험청(독립기관) ③연금청 ④세금청 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이 중 사회보험청은 현재 약 14,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스톡홀름에 있음.

- 사회보험청은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아동 등에 대해 재정 보호를 실시하고 장애 및 산업재해, 질병 및 노령 관련에서도 보험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비전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경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
- 사회보험청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약25%, GNP의 5%에 해당하며,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2018년은 약24억 유로(한화 약 32조원)을 지출하였고 매년 예산 계획 및 지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는 가정이 중심으로 출산·육아 등 가정복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녀가 있더라도 근로활동 및 소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득의 80%를 보장해주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히,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48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12세가 되는 해 까지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자녀의 나이 만2세까지 100일을 의무 사용해야 함. 또한 법적으로 480일중 3개월은 남편이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음.
- 가정보험은 자녀 임신기간 중, 출생 후, 자녀가 아플 경우 등의 경우에 적용되며, 임신에 따른 부서이동 등이 어려운 경우 출산 50일 전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근로상태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짐.
-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회보장은 근로상태를 기본으로 시작되는 등 근로의 가치를 중시하며, 각종 사회보장 제공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

시사점

-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국민들에게 단순 만족감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회지표에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그 중 주요한 수치가 출산율의 증가인데, 스웨덴은 한 때 0.9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1.9명까지 높아졌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6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가정복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출산·육아 등 가정복지에 대한 적극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회참여율을 증진시킨 결과(스웨덴 여성 사회진출율 87%)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 오게 되었음.
- 이는 단순히 소득보전의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음. 예컨대 오랜시간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48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사업주(고용주)는 임신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해주어야만 하고, 유급휴직 신청시 거절할 수 없는 등의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출산, 육아,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 효과적인 가정복지정책 수립이 요구됨.

□ 스웨덴 국립 사회보험청 가정보험정책과 방문사진



5.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 학교 교육개발부

□ 방문일시 : 2019. 8. 1(목) 13:30 ~ 15:30

□ 개 요

- 영문이름 :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 주요활동 :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 교육정책 운영현황 정취
- 발표(면담)자 : Stefan Melen(부서 담당자)

□ 주요내용

-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서, 290개의 기초자치단체(Kommun) 및 20개의 광역자치단체(Landst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연합회 학교 교육개발부는 스웨덴 전국 지자체의 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 분석, 중앙정부 건의, 지자체 필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교육 관련 자문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스웨덴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면, 실제 교육의 시행은 29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학교에서 이루어짐. 단, 대학교육은 중앙정부 소관이며 지자체는 유·초·중·고등 교육 및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름.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자체에서 관할하며 강력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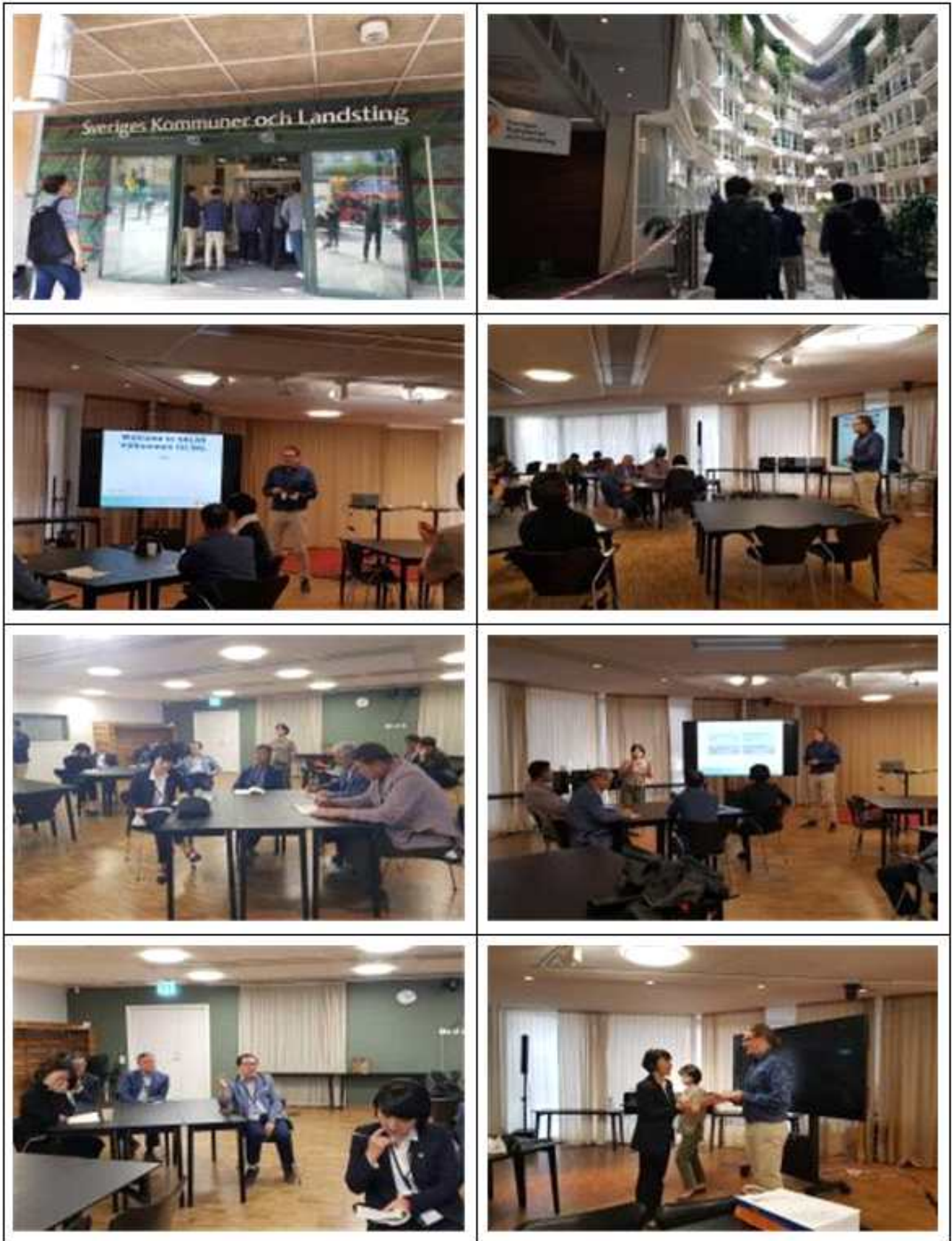
- 스웨덴에서 모든 교육은 무상이며, 필요한 예산은 모두 지방세로 운영되며, 평균적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 등 지자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별 조세율은 27%부터 33%까지 다양함(누진세를 포함할 경우 55% 수준)
- 스웨덴의 교육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18년도부터 0학년 교육이 의무화되었음. 초등학교는 9학년제로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교육내용은 인문사회, 경제, 기술과학 분야로 나누어 실시함. 대학교는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되며 대학교 진학률은 약 30% 정도임.
-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노동인력 확보와 고급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적 목적과 문화생활 향상, 교양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과정은 직업교육, 언어교육, 문화·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스웨덴 교육의 특이점은 사립학교 운영비 또한 지자체가 부담하며, 공립 및 사립학교의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함. 지자체 예산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정해져 있으며, 타 도시로 학생 전출시 해당 학생의 교육예산을 함께 이체 시키고 있음.
- 통계상 9년제 초등교육 까지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교과정 부터는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업무량 과다에 따른 직업으로서의 교사 선호도가 낮으며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시사점

- 스웨덴 교육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자체의 철저한 교육자치 제도를 들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교육의 집행은 전적으로 290개의 지자체와 지자체에 속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달리 표현하면 중앙정부가 세운 교육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학교의 권한임.
- 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역할분담이 뚜렷한데 중앙정부는 대학교와 중앙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는 유아·초·중·고등 교육 및 성인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짐.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화 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는 형성되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일선학교 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함. 이에 학생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에서의 실질적 교육 자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스웨덴은 실용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고학력에 대한 집착이 없어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에 불과함. 이에 따라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선행 교육 없이 철저히 공교육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체계 하에서 낮은 PISA¹⁾ 성적 등 단점도 있지만, 지나친 입시위주의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부작용 등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 제도변화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체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2015년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1위, 한국 11위, 스웨덴은 28위 였음

□ 스웨덴 지방자치연합회 학교 교육개발부 방문사진



6. 노르웨이 관광청

□ 방문일시 : 2019. 8. 5.(월) 09:00 ~ 10:30

□ 개 요

- 영문이름 : Innovation Norway
- 주요활동 : 노르웨이 관광청의 관광전략 청취
- 발표(면담)자 : Ingunn Sakshaug(부서 담당자)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산업통상여업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2004년 설립된 이래로 노르웨이 정부, 기업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노르웨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의 주요역할은 기업에 대한 자문, 판촉,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및 노르웨이 관광지의 개발·마케팅 등이 있음
-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량, 시장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①주요 소비시장(Consumer Markets) ②성장 시장(Growth Markets) ③프로젝트 시장(Project Markets)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역량은 크지 않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시장에 포함되어 있음.

〈 노르웨이 주요 시장구분 〉

Consumer Markets	Growth Markets	Project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way ○ Sweden ○ Denmark ○ Germany ○ Netherlands ○ United King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 ○ USA ○ Spain ○ France ○ Italy ○ Japan ○ China (S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sil ○ UAE ○ Korea ○ India (STB) ○ Indonesia ○ Taiwan ○ Thailand
출처 : 기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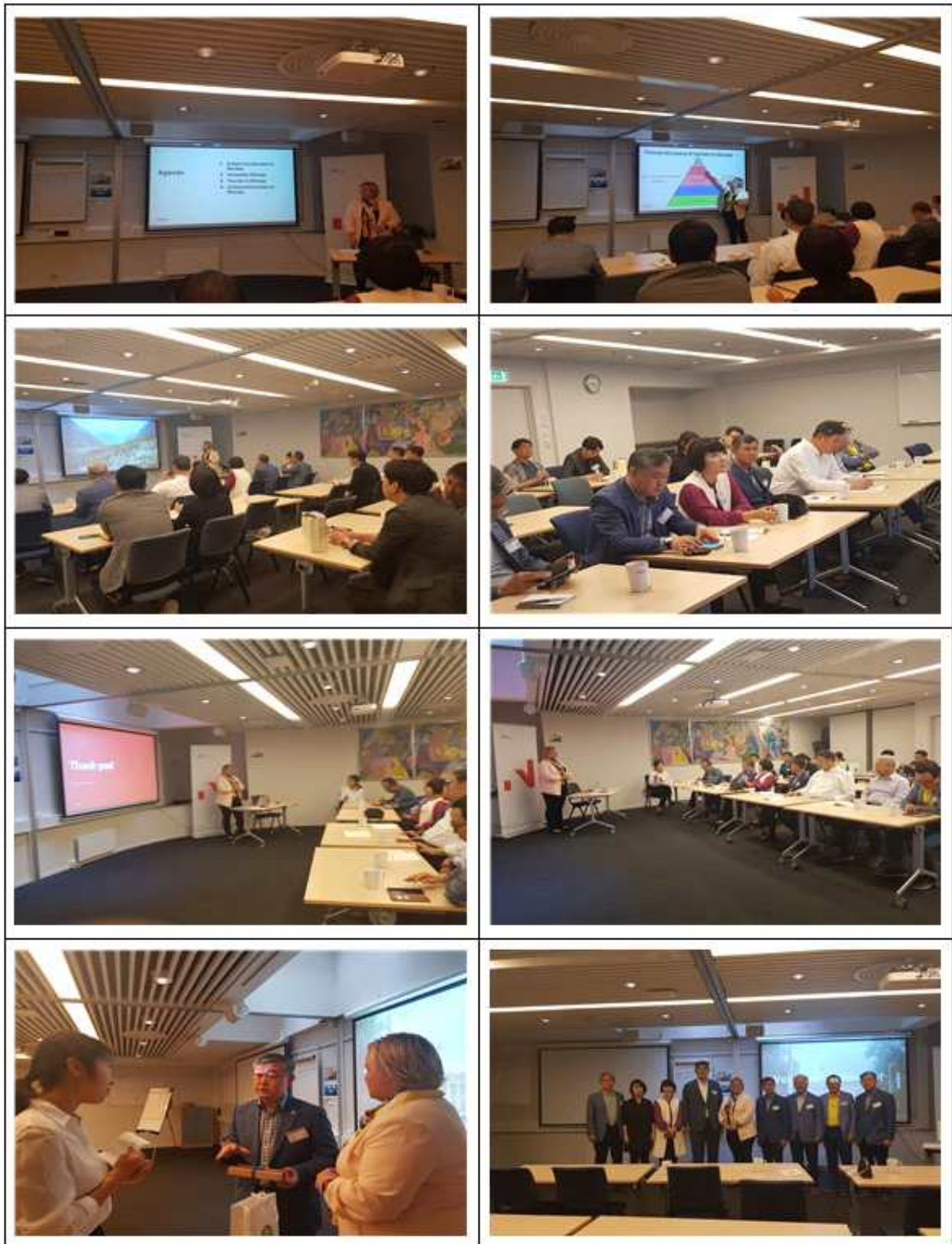
※ 인근 북유럽·서유럽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 및 경제강국이 주요 상대국이며, 신흥 경제 도상국이 신규 교류시장으로 진입중

- 노르웨이 관광지 개발 및 마케팅은 기관의 주요 과제로서 GDP의 4.2%가 관광수입이며, 관광소비업으로 한화 약21조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음. 또한 관광 수입중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30%에 달함.
-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정부기관인 동시에 노르웨이 브랜드화를 위한 표어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관광 슬로건은 ①자연이 주는 편안함 ②평범함을 넘어 ③지속가능한 노르웨이를 표방하고 있음.
- 노르웨이 관광분야의 강점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요 자원이며, 항공·철도·도로 등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 실제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노르웨이 관광의 주된 목적이 자연경관으로 나타났으나, 관광 성수기가 여름 3개월에만 집중되어 있어 연중 지속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특정 지역에서 탈피하여 전국 단위 관광지 개발이 주된 과제임.
- 관광분야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경관 뿐 아니라 자국 문화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르웨이 원주민인 사미족 거주지역 유네스코 지정, 다양한 건축물 및 음식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관광객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위해 잘 알려진 뮌크의 절규, 디즈니의 겨울왕국, 각종 영화 배경 등을 테마로 한 각종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실제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단순 여가, 무역 등 특정 목적, 회의·컨퍼런스 참여 등 노르웨이 방문목적에 대한 분류를 통해 그에 맞는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①카탈로그 등 인쇄물 ②SNS, 인터넷 ③무역박람회 등 행사·전시 ④언론 활용 등이 있음.

시사점

- 노르웨이는 피오르드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만, 북유럽 특성상 하계 기간에만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자연 이외에도 자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음. 우리나라도 관광산업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영문 슬로건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슬로건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교체하는 반면, 노르웨이는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슬로건이 정부기관명으로 사용 될 만큼 국가 표현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조선,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협력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민간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스웨덴은 워킹홀리데이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노르웨이와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 전으로 양국 청소년,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 조속한 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임.

□ 노르웨이 관광청 방문사진



Ⅲ

주요 현장 방문

1. 핀란드 칼라사타마(Kalasatama) 스마트시티

□ 방문일시 : 2019. 7. 31(수) 14:00 ~ 16:00

□ 주요내용

- 핀란드 헬싱키 외곽의 버려진 항구였던 '칼라사타마' 지역을 2010년부터 스마트그리드,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집약 스마트시티로 개발중임.
- 현재 3,000여명의 입주민과 기업의 각종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주거, 의료, 쇼핑, 공원 등이 한 공간에 집약된 친환경 복합 단지로 전력도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정부, 지자체, 대학, 대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을 연계하여 공공 주거와 기업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한 첨단 주거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현장 사진



2. 스웨덴 바사 박물관(Vasa MUseum)

□ 방문일시 : 2019. 8. 1(목) 16:00 ~ 17:00

□ 주요내용

-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으로 1628년 8월 10일 처녀항해 때 침몰한 바사호(號)가 전시된 곳으로, 모형이 아닌 1961년 333년만에 실물을 인양·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은 총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사호(號)의 준공, 취항, 침몰, 인양 등 각 과정을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흥미롭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특별한 주제없이 시대순으로 유물을 나열한 우리나라 박물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배’ 하나의 주제로 관람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기법이 흥미로웠음.

□ 현장 사진



3. 노르웨이 비겔란 조각공원

□ 방문일시 : 2019. 8. 4(일) 15:00 ~ 16:30

□ 주요내용

- 노르웨이 출신 세계적 조각가인 구스타브 비겔란의 작품 200여점이 전시된 공원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작품이 훌륭한 조화를 이뤄 오슬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꼽힘.
- 전시된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일생으로, 각 작품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지역 예술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예술품과 자연경관이 조화로운 공공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의 확대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좋은 사례임.

□ 현장 사진



4.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사

□ 방문일시 : 2019. 8. 4(일) 17:00 ~ 18:00

□ 주요내용

- 오슬로 시청은 오슬로의 심벌로서 시 의회와 행정의 중추가 되는 곳으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1915년 건립에 착수하여 35년이 지난 1950년에 완성되었음.
- 오슬로 시청은 매년 300여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공공 장소이며, 가장 유명한 행사로는 그레이트홀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으로, 우리나라의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 현장 사진



참고 1

현지 정보

핀란드(FINLAND)

- ◆수도 : 헬싱키(Helsinki)
- ◆면적 : 338,145km² (한반도의 약 1.5배)
- ◆종교 : 루터교(81.7%), 그리스정교(1.1%)
- ◆언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 ◆화폐 : 유로화(EUR)
-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느림(썸머타임 기간 7시간)



역사

12세기 초 스웨덴에 정복되어 스웨덴의 일부로 병합된 뒤 19세기 초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으며, 나폴레옹전쟁 후에는 러시아에 할양되어 러시아의 대공국으로 자치령이 되었으나,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로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헌법을 제정하였다.

독립 이후 두 차례나 일어난 러시아와의 전쟁(1939~1944)에서 패하여 영토의 일부가 러시아에 할양되고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1948년 소련의 제의로 체결된 핀·소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핀란드의 중립외교정책이 확인되었고, 양국의 기본관계가 정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자연환경

북위 60~70°, 동경 20~32°에 걸쳐 있으며, 남북길이는 1,165km이고 동서 최대너비는 550km이다. 북쪽으로 스웨덴, 서쪽으로 보트니아 만, 남쪽으로 핀란드 만, 동쪽으로 러시아 연방에 접해 있다.

북극권에 속하는 지역의 기온은 극단적으로 변화하여, 긴 겨울 동안에는 -30℃로 떨어졌다가 5~7월의 73일 동안 라플란드 지방에서 백야현상이 일어날 때는 27℃까지 상승한다.

만류, 발트 해, 저지대 특성 등이 결합하여 기후를 온화하게 해주는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위 60°이북에서도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후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헬싱키의 기온은 -6℃~18℃로 변화한다. 연평균기온은 5℃이며 연평균강수량은 660mm인데, 이 가운데 1/3가량이 진눈깨비나 눈으로 내린다.

경제

사회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혼합된 선진경제국이다. 국민총생산(GNP)은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GNP의 원천은 주로 제조업(1/4), 무역·금융업(1/4), 개인 서비스업이다. 농업은 GNP의 1/12 미만이다.

정치 사회

1919년의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로 뽑힌 선거인단이 6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핀란드 공화국의 각료수반이 되며, 총리와 행정각료인 내각 구성원을 임명한다. 헌법제정권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이들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된다.

연합정부는 보통 핀란드의 4대 주요정당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과 최고행정재판소이다.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실직 연금제도 및 가족복지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보건상태는 우수해서 남자 평균수명이 70세, 여자 평균수명이 79세이다. 헬싱키 같은 도시권에서는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저소득 가정은 정부가 보조하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고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이며, 이는 6년의 하급과정과 3년의 상급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교육체계 덕분에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

핀란드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73년 8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한국은 1973년 8월에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했고, 핀란드는 1977년 9월에 주한 핀란드 상무관실을 개설했다가 1978년 11월에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핀란드는 2002년 4월에 할로넨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바 있으며, 한국은 2006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 2015년 10월에 정의화 국회의장,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수출액은 13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은 3억 3,0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력용 기기, 정밀화학연료, 선박품, 목재류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승용차,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이다. 한국은 핀란드에 2017년 기준 누계로 0.65억 달러, 핀란드는 한국에 2억 4,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상담을 돕기 위해 헬싱키무역관을 설치했다.

2017년 기준 핀란드에는 611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핀란드수도인 헬싱키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2018년 12월 기준 204명의 핀란드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스웨덴(SWEDEN)

- ◆ 면적 : 449,964km² (한반도의 2배)
- ◆ 수도 : 스톡홀름
- ◆ 인종 : 게르만족(99%)
- ◆ 언어 : 스웨덴어
- ◆ 종교 : 루터교 소속인 스웨덴 교회(87%)
- ◆ 화폐 : 크로나 (SEK)
- ◆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썸머타임 기간 7시간)



자연환경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Scandinavia Peninsula) 내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북위 55.5°~69°). 스웨덴의 높은 산들은 주로 북쪽의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중부와 남부 지역 대부분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스웨덴 동쪽으로는 핀란드, 서쪽으로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남쪽에는 덴마크가 인접하여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부터 여러 강(江)들이 보트니아 만(Gulf of Bothnia)과 발트(Baltic) 해로 흐르며, 수도인 스톡홀름(Stockholm) 이북 지역은 삼림이 무성한 반면에 남부 지역은 빙하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비옥하지 못한 평야로서 일부 지역에서만 곡물 생산과 낙농업이 가능하다.

한편 스웨덴의 국토는 삼림 54%, 산지 16%, 경작지 8%, 호수와 하천 9%, 기타 구릉지 13%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9만 6,000여 개의 호수가 강들과 함께 수력발전 및 목재 수송에 이용된다.

정치사회

스웨덴에서는 1866년 의회제도가 양원제(귀족과 평민을 각각 대표로 한다)로 개혁되었으며, 1919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25%가 해외로 이주할 만큼 유럽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189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철강과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보임에 따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20세기 들어서 극심한 노사분쟁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1918년~1920년 동안 추진된 헌법개정을 통하여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제도가 실시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스웨덴은 유럽 대륙에서 발발하는 어떤 패권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동맹 중립정책'을 채택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북유럽 3국의 상호 공조 아래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스웨덴의 비동맹 중립정책은 바로 이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확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중립을 유지하였다. 1949년에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중립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약 200년 동안 그 어떤 전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다.

1920년 이후 스웨덴의 국내 정치는 사회주의계 정당(사민당, 좌파당)과 보수계 정당(보수당, 중앙당, 자유당)으로 구성된 양대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정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은 1971년 의회양원제를 폐지하였고, 1994년에는 과거 3년마다 실시하던 선거를 4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하기에 이른다.

경제

과거 스웨덴에서 생산된 주요 공산품은 기계류, 차량, 전자제품, 통신자재, 선박 등이었고 그 밖에 가구와 도자기, 유리제품 등도 세계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러다 197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고임금과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져 스웨덴의 경제성장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 초 스웨덴에서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정부의 경기안정 정책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하여 1994년 이후부터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스웨덴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¹⁾의 창설회원국으로 1994년 1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12개 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 나라 간 광역경제권인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출범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1995년 1월 마침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가입하게 된다.

한편 스웨덴은 유럽통화연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 가입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반대 여론과 자율적인 경제정책 유지를 이유로 1999년 1월에 출범한 유럽단일통화체제(유로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00년 3월 당시 사민당 정부가 유로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하여 같은 해 9월 14일 동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사회복지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잘 알려져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처럼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하여 왔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을 누리며 살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세 미만 아동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지급), 적응연금(배우자 사망 시 지급), 미망인 연금 등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로 1999년에 도입된 ‘신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연동 차등 연금제’,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 소득 보장’,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 도입’, ‘조기퇴직 연령 인하(61세부터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겠지만 스웨덴에서도 노령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0%가 노령층인데 스웨덴 정부는 연금제도의 실시와 노인 보건시설 운영 등으로 노인에게 대한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약 16% 수준이고, 노령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서 연금이 가장 많은 편이다. 한편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을 위한 건강을 상담하고, 스웨덴 지방정부는 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 병동 입원비를 부담한다.

한국과의 관계

스웨덴은 한국과 1959년에 정식으로 외교를 수교했고, 북한과는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즉 남북한 양측에 상주 공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과 스웨덴 두 나라 사이가 포괄적인 실질 관계로 성장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외교관계를 취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면에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이 스웨덴에 지불해야 할 채무의 상환 불이행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남북한 균형 입장에 있던 스웨덴은 점차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정책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의 숫자는 1,500명 정도(체류자도 포함)이다. 스웨덴 한인회는 1962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약 300여 가구가 한인회의 회원으로 있다. 참고로 현재 스웨덴에는 약 1만 명의 입양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양한인협회(Adopted Koreans' Association, AKF)라는 단체는 1986년에 창립되어 약 20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노르웨이(NORWAY)

- ◆ 면적 : 324,220km²
- ◆ 수도 : 오슬로(Oslo)
- ◆ 언어 : 노르웨이어
- ◆ 종교 : 루터복음교(94%)
- ◆ 화폐 : 크로네 (NOK)
- ◆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썸머타임 기간 7시간)



자연환경

노르웨이 국토의 총면적은 38만 6882km²로 남한의 약 4배에 달한다. 노르웨이령을 제외한 노르웨이 본토만의 면적은 32만 3802km²이며 그 중 3%는 농토, 21%는 산림이다.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Svalbard) 제도의 면적은 6만 2700km², 북극에 위치한 얀마옌(Jan Mayen) 섬의 면적은 380km²이다.

노르웨이의 기후는 전체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다. 연평균 기온은 6.9℃를 보인다. 여름 최고 기온은 28.2℃, 7월 평균은 16.4℃이며, 겨울 최저 기온은 -19.7℃, 1월 평균은 -4.3℃이다. 봄과 가을의 온난한 시기에는 잦은 강우 현상으로 저온 현상이 발생한다.

노르웨이는 위도상으로만 볼 때는 매우 추운 나라라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내륙, 산간지방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추운 날씨이며, 여름은 평균 25℃~26℃로 한국보다 덜 덥다. 또한 습하지 않은 약간 건조한 날씨이고, 강수량이 매우 풍부하다.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린다.

정치

노르웨이는 1905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웨덴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덴마크의 왕자였던 칼(Carl)을 호콘 7세(Haakon VII) 국왕으로 추대한 이후 입헌군주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노르웨이는 1814년 5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상 독립을 이룩하였다. 1814년~1905년간에는 스웨덴과 연합을 형성하였다.

노르웨이 헌법은 1814년 5월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내각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현행 제도적 관행은 영국과 유사하다.

노르웨이의 국왕은 헌법상 교회의 수장이며, 총리 및 각료 임명권, 법률거부권, 국군통수권을 보유하나 형식적인 권리일 뿐이다.

노르웨이의 행정부는 2012년 현재, 총리실을 비롯하여 총 18개의 부(部)와 18명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외교부의 경우에는 2명의 장관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의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총리는 의회의 동의 아래 형식상 국왕이 임명한다. 2005년에 실시된 총선 이래 노동당, 중앙당, 사회주의좌파당 연합 중도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Storting)는 1814년 이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전체 의원의 1/4은 상원(Lagting)에, 3/4은 하원(Odelsting)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0월에 양원제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의회는 19개의 주(County)에서 선출되는 총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역·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크기 및 인구 수에 따라 4명~15명의 일정 수를 선출한다. 노르웨이에는 의회 해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의원 수는 1920년대부터 약 반세기 동안 150명이었으나 1973년 155명, 1984년 157명, 1989년 165명, 2003년 169명으로 증가하였다.

의회 내 정당은 크게 사회주의, 중도, 우파계열로 구분된다.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 노동당, 사회주의좌파당이 해당되며, 중도 계열에는 기독교민주당, 중앙당, 자유당이, 우파 계열에는 보수당, 진보당이 대표적이다

노르웨이는 4년마다 총선을 실시하며, 지방선거도 4년마다 총선 중간에 실시한다. 따라서 2년마다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18세이다. 1898년에 도입된 보통선거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졌으나, 1913년부터는 여성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경제

노르웨이는 1800년대 초반 해도 소득 수준이 유럽에서 최하위였다. 주 수입원은 목재, 수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이었다. 80% 이상의 국민이 수산해양업에 종사한 반면, 전체 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한 경작지, 극한 기후, 낮은 인구 밀도 등으로 인해 농업 및 기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1969년 12월에는 북해에서 원유가 발견되었다. 노르웨이는 이 원유를 1970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3년 오일파동을 겪으며 유가가 급등하였고, 노르웨이는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에너지와 해운, 해양, 수산업 분야의 강국이다. 노르웨이의 경제 규모는 적은 인구 등으로 비교적 소규모 경제에 해당하여 명목 국내총생산(GDP)¹⁾ 기준으로는 19개 서유럽 국가 중 12번째의 경제 규모이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2009년에 7만 9085달러를 기록하면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 2012년 9월 현재 세계 제1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5위의 수출국이다. 천연가스는 세계 5위의 생산국이자 수출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로 인한 수입액은 노르웨이 국내총생산의 25%, 국가 재정수입의 33%를 차지한다.

노르웨이는 석유 관련 산업의 고용자가 약 1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석유산업은 다른 산업에도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매장량의 약 30%가 생산되었으며, 앞으로 석유 공급은 50년, 가스 공급은 100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¹⁾ 회원국으로 친서방노선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59년 3월 이래 한국과 상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25전쟁 시에는 한국에 외과 병원단을 파견하였다. 그 후 의료센터(Medical Center)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해 왔다.

2006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³⁾ 간 자유무역협정(FTA)⁴⁾이 발효된 이후 한국-노르웨이 양국 간 교역량은 4배, 투자 규모는 15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경제·통상 협력 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2009년 한국-노르웨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은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녹색성장'이라는 양국의 미래 공동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2

출장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성별	비고
			한글	영문(여권기재)		
1	강원	의 장	한 금 석	HAN KEUM SUK	남	
2		행정7급	이 현 호	LEE HYUN HO	남	
3	부산	의 장	박 인 영	PARK IN YOUNG	여	
4		행정6급	김 정 인	KIM JEONG IN	남	
5	인천	의 장	이 용 범	LEE YONG BUM	남	
6		행정7급	이 풍 희	LEE POONG HUI	남	
7	세종	의 장	서 금 택	SEO GUM TAIC	남	
8		별정5급	황 관 영	HWANG KWAN YOUNG	남	
9	충북	의 장	장 선 배	CHANG SEON BAE	남	
10		행정5급	장 기 봉	JANG GI BONG	남	
11	전북	의 장	송 성 환	SONG SUNG HWAN	남	
12		행정6급	조 현 철	CHO HYUN CHUL	남	
13	경북	의 장	장 경 식	JANG KYOUNG SIK	남	
14		행정6급	오 명 호	OH MYEONG HO	남	
15	경남	의 장	김 지 수	KIM JI SOO	여	
16		행정6급	이 향 주	LEE HYANG JU	여	
17	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이 동 영	LEE DONG YUNG	남	
18		행정6급	정 진 경	JUNG JIN KYOUNG	여	
19		행정6급	나 병 섭	NA BYUNG SUB	남	